

정치불안 내풍·관세전쟁 외풍... '기업하기 힘든 나라' 직면

흔들리는 자본시장

탄핵선고 지연에 정치혼란 지속 전 세계 '트럼프세션' 우려 확산 "관세 강도에 코스피 상단 영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재계와 자본시장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는 따로 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 안정되면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반면 정치가 안정화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경제가 살고 증시가 우상향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두 차례 탄핵으로 본 한국 증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코스피는 어땠을까.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0% 오른 2097.35를 기록했다. 당시 증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증시의 호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2270까지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관정 때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증시가 반등했다. 기각 선고가 난 2004년 5월 14일, 이날 코스피는 768.46포인트로 전일 대비 2.74% 하락한 뒤 다음 거래일(2004년 5월 17일)까지 추가 하락(728.98포인트) 후 반등했다. 연말 코스피는 878.43까지 반등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시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보다는 기각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12.3 계엄사태' 후 4개월가량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시는 장기간 악재를 소화했고, 오히려 상장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코스피 저평가 분석에 상승 동력을 마련했다.

이형중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개월 이상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은 제한적인 데다 지속성도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지난 비상계엄 때의 상황을 참고하면 탄핵 결정 이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외인 매수) 짓누르는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증시가 살아날까. 아니다. 경제(기업 성장)가 살아야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고, 증시도 달릴 수 있다.

현실은 잿빛이다. 세계경제가 트럼프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14.2% 빠졌다.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건설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을 달리는 경제지표는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증시를 등진다.

전세계 금융시장도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친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를 세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며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0.3% 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은 외국인 매수세

와 환율에 긍정적이다"면서 "성장 모멘텀이 높은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순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환율의 변동성이 외국인 매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이슈가 더 큰 영향력 미칠 듯

국내 탄핵 이슈보다 더 큰 걱정은 나라 밖에서 벌어오는 외풍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이슈가 일단락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상황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핵폭탄급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의 관세 공격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을 꼭 집어 미국의 대표적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언급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로 보는 '더티 15'에도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위생검역 규제, 정부 보조금, 미국에 불리한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해 온 한국의 30개 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미국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을 이유로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폭탄의 영향권에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음 달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 가능성도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강도가 실제로 높게 유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코스피 증시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형중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소비 심리 둔화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우려를 유발한다"며 "이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채권 등 韓 자산 위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 1면 '탄핵심판 득장에...'서 계속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든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이 커진 탓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CDS 프리미엄이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

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제로성장을 예상한 캐피탈이코노믹스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 판결 불확실성을 꼽았다.

/원관희 기자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의를필 제250226-00875-ADP (2025.2.26~2026.2.25)

* KB국민카드